

KBS 특별방송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말씀

질 문 ● 참여정부 임기 절반을 보낸 소회와 앞으로 남은 후반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밤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한번 부딪쳐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엇그제 발표된 것으로 29%입니다. 책임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29% 지지도를 가지고 국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책임정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가지고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한 소신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던질 거 뭐 있냐? 당신이 결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불쑥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저 사이에서 새로운 어떤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언론계가 다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그 얘기를 중심에 놓고, 경제나 정치·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얘기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국민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2003년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두 번이나 내리셔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고 전 국토를 균형개발한다고 전국을 투기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 8월 31일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 우선 질문의 전제부터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원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현상은 금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이 일부 투기꾼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은 하면서 투기는 잡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주택 가격 파동은 지역개발과 거기에 모여드는 얼마간의 투기꾼들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부동산 가격 인상의 핵심적 요소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성입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정책은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저항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자들 쪽의 여론이 총론에서는 찬성하다가 각론 만들 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세금 폭탄이다. 또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를 들고 나와 주저앉혀 버립니다. 정부가 정책의 총론을 얘기할 때는 전부 박수소리가 나오니까 자신을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입안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씩 가면서 반대에 부딪치게 됩니다. 지난 18일경부터 언론 보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정책 때문에 내 세금 올라가겠구나.' 관계없는 서민들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고, '저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경제가 먼저 있고, 그 국민경제를 운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시장인 것입니다.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입니다. 양극화나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가장 첫번째 정책이 부동산정책입니다. 원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책에 있어서도 1번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값이 올라 경제에 거품 들어갔다, 어느 날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경제가 따라서 부실화됩니다. 경제가 또 한번 홍역을 앓게 되는데, 경제에 파동이 생길 때마다 빈부격차는 한 칸씩 더 늘어납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때 빈부격차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민들 다 죽이는 것이 부동산이고 경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유재산의 원리, 시장원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헛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0·29대책은 사실은 용두사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호랑이를 그리

려고 했는데 표범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밖에 못 그렸습니다. 각론에 들어가니까 보유세 문제에 관해서 이런 공격 들어오고 저런 공격이 들어와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 때부터 추위를 타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이 안을 들고 대통령한테 와서 이런저런 저항이 있다고 보고해서 하나씩 빠지더니, 결국 가져간 것도 당정협의를 할 때 또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가니까 왕창 깎여 버렸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역대로 계속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저항 때문이고 이 저항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성이 생겨서 버텨 보자고 다 버팁니다. 법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지켜 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수용할 때 효과가 있지 전부 다 버티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자동차 우측통행 못하겠다, 당장 좌측통행하겠다 하고 자동차 10%만 거리에서 거꾸로 주행해 버리면 도로는 그날로 마비돼 버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때라야 법이 되는 것인데 내성이 생겨서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2000년 8월 이래 계속 경기가 나쁘고, 특히 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동안도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기업들도 활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기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우선 사람이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으면 좋아진다고 말해도 좋겠죠. 병은 나았지만 아직 건강이 좀 시원찮은데,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병은 나았지만 활력 있게 산에도 바로 못 올라가고 필필 뛰지 못하면 답답하겠죠? 게다가

가 경제 전체로서는 그런 대로 간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인들, 뭐 이분들이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통령으로서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변명이 아니고 실상을 조금 얘기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2003년 취임했을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2000년에 우리 가계부채가 266조 원이었는데, 2002년에 439조 원으로 올라가고 2003년에 역시 경총 뛰었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국민들에게 전부 빌려줬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채무 18조 원이 2003년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90조 원으로 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연체율이 14%까지 올라 버렸으니까 우리 경제가 건달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용불량자 숫자가 208만 명, 245만 명, 2002년에 260만 명으로 올라갔다 2003년에 370만 명, 2004년에 38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지표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1년도에 4.9%, 2002년에 7.9%까지 갔다가 2003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거품, 벤처 거품 얘기를 합니다만 카드 거품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카드 거품으로 인해서 금융위기에 부닥쳤습니다. 금융위기에 부닥친 뒤 우리가 비상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카드 부채를 연기해 주고 부도를 안 내고 살려가자 했을 때 '관치금융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90조 원을 터뜨려 놓으면 한국 경제는 죽어 버렸을 겁니다. 원칙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든 경제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는 국가가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습했습니다. 합법적인 도구가 없어서 은행들 모아 놓고 은행감독원이 눈 부라리면서 합의 반, 강제 반으로 그 고비를 넘겨 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바로 저에게 안겨졌습니다. 북핵문제, 이라크전쟁 위기, 게다가 한·미관계가 벌어져서 신용등급을 깎겠다고 무디스가 당선자 시절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깎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겨우 겨우 그 뒤에 서너 차례 카드회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지금은 카드회사가 다시 살아나서 카드회사 주식을 다 팔면 그때 넣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돈을 많이 넣었는데, 다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가는 600포인트 아래에서 정권이 출발했는데 어제 1,094포인트까지, 거의 1,100포인트 수준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대통령이 조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쁠 거다.' 라고 하지만, OECD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OECD 30개 선진국가 중에서 4위 정도가 될 것입니다. S&P에서 얼마 전에 신용등급을 하나 올려 줬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외평채 가산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2001년도에는 2%의 가산금리를 줘야 했고, 2003년도에는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산금리가 0.38% 정도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 약간 더 주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시장의 평가가 대개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전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지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망이 밝은 것은 기술경쟁력 부문입니다. 세계 2위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과학경쟁력 부문은 15위 수준입니다. 12위까지 갔다가 2003년, 2004년에 다시 떨어졌다가 15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종합경쟁력 순위는 29위에서 37위로 떨어졌다가 35위, 29위로 현재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계속 어둡게 애

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를 어렵게 얘기해서 우리 경제를 위협에 빠뜨렸던 두 건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를 어렵게, 어렵게 말하지 않는 절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기업·산업·소득·고용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양극화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계층 간 빈부격차의 체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에는 중산층과 사회 해체로까지 나아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동반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해결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 우선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동반성장을 올해의 국정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양극화 실태를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서 중소기업정책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어떤든 심각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은 사실이고, 정보화 시대 또는 세계화 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 하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지식과 정보화 격차가 더욱 커지고, 또 세계화됨에 따라서 승자독식의 시장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약은 아닙니다.

소득 5분위배율 국제 비교가 국제적인 표준 비교방법인데, 미국이 2003년도에 14.7, 중국이 10.7, 영국과 호주가 7.0, 이탈리아가 6.5, 캐나다가 5.8, 프랑스 5.6이고, 한국이 2004년에 5.41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4.3, 스웨덴 4.0, 노르웨이

3.9, 핀란드 3.8입니다. 제가 성공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아주 모범적입니다. 미국이 제일 심합니다. 최악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자거나, 우리 경제가 세계화된 1990년대 초반부터 심각하게 변화해 온 것이라고 해서 '참여정부 책임 없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입니다. 보다 질 높고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의 품질이 나빠졌습니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서 품질이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하자면 결국 중소기업이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중소기업정책을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일자리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훨씬 약합니다. 지금도 투자 의욕 말씀하셨는데 투자 의욕이 있다 없다 하고 시비하는 쪽은 다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은 여기 나와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큰소리도 한번 내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아마 7천 개 샘플 조사를 하고 그 뒤에 1만 개가 넘는 샘플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과가 언제 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전의 정책과는 다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방 중소기업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하자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에 관해서는 가히 과감하다 못해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 클러스터,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대학교에 주던 R&D 예산이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방 R&D 예산이 27%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37%까지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2008년에 가면 그것이 42%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 밖에 서비스업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지만, 이렇게 2년 반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서민들 몫이 조금 많아지도록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이렇게 많지만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예산은 사회안전망, 사회복지 예산 부문이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시작이기 때문에 가파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도 가파르게 유지해서 소득분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문●저희 공장 부근에는 3천 원짜리 밥을 팔고 있는 소위 ‘함바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최근에 문을 닫는 집이 늘고 문을 연 집마저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가 반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서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청년실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기업이나 청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 말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문●이번에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주요 정책이 세금과 공급 확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산층은 경제 침체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 많이 늘어나 굉장히 어려운데 부동산 정책도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챙기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모두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실감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공장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바’도 사라지고, 이 말이 일본말 아닌가 싶은데, ‘노동자합숙소’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제가 사실은 1966년도에 함바 생활을 몇 달 했던 함바 출신입니다.

공장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앞으로도 지속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두 자리 수 성장을 할 때도 한쪽에서 경제가 무너져 간 곳은 무너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신발공업 같은 것이 아주 전형적인 것이고, 부산의 합판공업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제는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지역에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부분에서 항상 죽는 소리가 납니다. 재래시장이 과연 지금 내리막을 어느 수준에서 멈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물시장으로서 또는 새로운 근대적인 시장으로서 발버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너지는 곳이 있고, 그것을 어느 선에서 멈추고 또 특화시키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신진대사의 과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는 끊임없이 팽창해 가고 있음에도 어려운 곳은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실업이 됐을 때 사회안전망을 작동시키고, 실업보험으로 일시적으로 견디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하고, 직업훈련도 시켜 주고, 직업상담·알선도 하는 등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은 점차 두터워져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빨리 변화하고 적응해서 우리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 책임일 수 없고 지혜롭게 함께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자부심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2001년경에 약 33% 정도였는데 그것이 지금 2004년에는 44%까지

올라왔습니다.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대통령도 기업을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기업과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한 성과를 나눌 때 서로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또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남이 생각지 않았던 정보, 상술 등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씩의 편법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이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을 많이 했지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런 불공정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대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방법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고, 모두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공하면 그때부터 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후보 때 '신주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공정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창의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크게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지금 벤처 CEO들이 활발하게 새로운 기업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포럼, 벤처CEO포럼 등이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가 안된다고 할 때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나 정부정책을 믿을 수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규제가 많다. 출자총액제한 풀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시장이 활력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국내 시장에 소비가 왕성하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 있으면 투자합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라는 것은 제품기술이지요. 기술, 브랜드 파워, 그 다음에 마케팅, 조직, 능력 등이 세계 수준에서 자신 있을 때 투

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양극화 얘기가 나왔는데 경쟁에 관한 한 한국 사람은 믿어도 좋습니다. 연대와 협동의 실패가 경쟁의 성공을 얼마만큼 갉아먹어 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쟁하는 데는 우리 한국 괜찮습니다. 얘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투자는 그런 환경입니다. 돈 벌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조건으로는 돈 되는 과학기술과 생산성 있게 일 잘하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투입해 놓으면 금방 생산성이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현장에서 혁신을 딱딱 이루어 내서 성과를 올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지요. 혁신은 우리 기업에 이미 문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 혁신하느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부도 걸어가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기업과 함께 뛰자, 기업을 앞지르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환경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문제, 절박한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없이 청년실업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는데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학교를 나온 고급 인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금융 허브, 동북아 물류중심을 하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동북아 금융 허브를 한국이 어떻게 한다는 얘지요?” 라면서 사람들이 좀 웃습니다. 그러나 그것 안 하면 한국이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학력 높은 사람들, 어지간하면 MBA 따온 사람들이 꼭 찾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그리고 물류와 같은 고급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높은 수준의 교육·의료 서비스 등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산업적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또 불만이 많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2년을 가르쳐

야 겨우 써먹을 수 있습니다. 첨단인력은 연구인력으로 키우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특성화 쪽으로 집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교육해 가는 아주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요와 공급 간에 정보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고용 인프라를 짜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아주 고급 어학교육까지 시켜서 해외취업까지 나가고 있는데 좀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으로만 가려 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중소기업에서 승부를 걸어 보려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혁신 중소기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중소기업에서 혁신에 성공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좀더 낮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대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실업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그 수준에는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청년실업 문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부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부담도 많고 세금 부담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공한 나라라고 지적한 나라는 국민부담률이 50%를 넘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5%입니다. 조세부담률은 19%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같은 국민부담률 중에서도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40%, 50% 올리자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나 단 1%라도 올려 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득 5분위배율이 우리는 지금 5배인데, 즉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가 5.4배인데 이것이 4배 수준으로 가면 참 좋은 것입니다. 5배 이하로 가도록 우리 사회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 있게 소비하고,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시대, 소위 '지속성장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 좀 짜증나시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더 내시고 하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정부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심이 나빠져서 자고 나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 때문에 길거리 못 나갈 정도로 불안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 ●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에는 노사·지역·환경·세대 문제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갈등사안마다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그 골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회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다면,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우리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할 때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저와 제 참모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핵심공약은 개혁과 통합,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개혁은 잘 된 것과 못된 것이 있지만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에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노사영역에서만 안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다른 부문의 갈등에 있어서도 지금 뚜렷한 어떤 사회적 대안이나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갈등구조, 노사에 있어서의 갈등구조는 그것 자체만이라

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제 영역에 있어서의 갈등구조를 더 깊게 하고 해결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갈등문제입니다.

제가 갈등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했겠는지 짐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에 천성산터널 공사 중단요구 단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가 당선자 시절에 시작됐고, 그해 3월에 나이스 문제로 전교조와 정부가 부닥쳤고, 역시 3월에 환경단체가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3보1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니까 터져 버린 것입니다. 6월에는 철도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에 원전수거물·폐기물관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불안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사패산 사건에는 저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불안 방폐장은 17년 동안 미루어 온 정책과제라서 더 미루어 둘 수 없었습니다. 한번 해결해 본다고 덤벼 들었던 것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부닥치면서 하나하나 대강 잠은 재웠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대처할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6개 시·도에서 5명씩 대표를 뽑아 사회적 지도자들로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런 갈등과제를 중재하고 해결하고자 했고, 정부도 갈등해소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교육했습니다. 또 정부가 모든 행정을 집행할 때 사전에 갈등관리에 관한 것들을 전부 점검하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탄강댐 사건에서 지속가능위원회와 그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결국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제 덮어 버리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포괄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 문제입니다. 포괄적인 정책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한국 사회의 과제

입니다. 그렇게 동감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저도 무슨 묘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가장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뽑아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 가장 안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가 1990년부터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에 가담하지 않고, 지역통합이라고 하는 정치노선을 힘들게 지켜 왔습니다. 한번도 선거에서의 당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도 내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매 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소위 지역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열적 풍토와 싸워 왔습니다. 말이 싸운다는 것이지 그것은 지역을 달리는 사람에게는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고향에서 핍박받으면서까지 서로 적대하는 지역에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별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큰 성과는 없고, 앞으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인사하는 데 하나하나 지역문제가 걸립니다. 이것저것 지역문제가 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내다봐도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노·사·정 대타협, 내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면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노동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사용자도 설득 못했고, 그것이 가장 뼈아픈 것입니다.

성공을 얘기하라고 하면 대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 미리 아실 만한 얘기는 하지 않고, 국민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부혁신입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큰 저항 없이 보람 있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관리 전산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설계에 참여

하고 토론했고, 매주 한 번씩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우리 업무 하나하나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와대 문서는 모든 것이 전자문서로 돼 있고, 제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단 한 장의 종이도 유실되는 것 없이 모든 기록이 다 보존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록은 3초 이내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 기록의 국장 또는 팀장, 팀원이 의견을 얘기했던 과정이 전부 정책실명제로 돼 있습니다. 5년 뒤에도 어떤 정책이 문제됐을 때 그 정책을 다루었던 사람의 책임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포대'란 말 들어 보셨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자랑삼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다음, 이것을 우리 정부 시스템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질 문 ●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핵심적 정책 이슈는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재조정 문제를 놓고 이념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양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미관계를 풀어 가는 원칙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부와 다른 참가국들 간에 이견들은 조정된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이 두 가지이고,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 분야가 한·미동맹과 북한 핵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의견은 다양할지라도 적어도 정부는 그래야 됩니다.

어떻든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수용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위 '팍스아메리

카'나 같은 패권적 질서라고 보든 안 보든 간에, 이론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만큼은 수용해야 됩니다.

한국은 좀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좋았던 시기와 나빴던 시기가 다 있었지만, 지금은 남북관계나 동북아 전체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안전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는데 기분 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국이 이리 한다 하면 우리도 말없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한테 불리하고 억울한 것도 말 못하고 수용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불리한 것은 '못하겠소.' 하고, 좋은 것은 '같이합시다.' 하고, 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말만 나오면 일단 반대하고 보는 반미정서도 있고,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미국을 배척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 위에서 평가해 본다면 참여정부는 소위 자주국방, 또 자주적인 외교 관계, 완전한 대등이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한·미 관계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확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시간표까지 그렸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권을 우리 한국군이 언제 환수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보전력에 관해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돈이 좀더 들더라도 한국의 국방역량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 놓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에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달리는 대로 궤도 위에 그냥 두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커브를 돌리려고 하면 배도 기울어

지고, 버스 안에 탔던 사람 몸도 기울어지고, 궤도 위에는 바퀴 부딪치는 소리가 뿅 하고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관계가 약간 수정되면 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니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적절한 수준으로, 탈선하지 않는 수준으로 궤도 위를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탈선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의 커브는 커브대로 가자, 너무 급커브하면 탈선할 것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해 가는데 그 속도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미국 정부 전체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자유롭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탄소리가 좀 나온다고 우리 신문이 크게 받아 써 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감히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벌벌 떨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말씀 나왔는데 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한국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렇든 또 고집이 좀 있어서 그렇든 간에, 어쨌든 ‘그것은 안됩니다.’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한때 무력행사 얘기가 나왔지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어렵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평화적 해결로 갔고, 평화적 해결로 한참 가다가 대화에 의한 해결로 또 바뀌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그렇게 저도 믿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질 문 ●삼봉 정도전은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수위 시절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봉 얘기에 비춰 보면 국민이 대통령보다 조금 높다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대통령님의 정책구상과 그것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과의 괴리를 말씀하시면

서 지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 갈등구조상 가능한 것이냐, 그럴 만큼 정책을 조율해야 할 상황이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단순한 제도개혁으로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구도 해소라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나의 정책수단에 불과한 것에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 일반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 문제에 강하게 집중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여러 가지 논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을 본받고 싶은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업적이 하도 탁월해서 나를 그분한테 비기면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싫어서였습니다.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다.” 또 “백성은 바다요, 군주는 배라서 백성이 노하면 그 배를 뒤집어 버린다.” 이것도 아마 그분의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백성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항상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을 읽는 것과, 그 시기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작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난 1986년에 있었던 금강산탐사건입니다. 사기극이죠. 그럴 때 민심이 아마 가장 조작된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심도 위협한 것이 있습니다. 1989년도에 경제정책에

대한 민심이 아주 험악해서 민정당이 민자당을 만들고, 그래서 조순 부총리를 밀어낸 다음 당에서 부총리를 맡아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 부양책 이후 1990년도에 부동산 파동과 같은 치명적인 경제혼란이 와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정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바로 불신과 적대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1990년 3당합당에 참여하지 않고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처럼 죽기살기로 싸우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재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분열의 시대라고 하는 이 질곡을 하나 더 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강 발등의 불은 끄고 보니까, 이 문제가 체계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정부가 약체정부입니다. 이 약체정부가 구조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정부가 계속해서 약체정부입니다. 여소야대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하더라도 항상 여소야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독일처럼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연정이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정책구도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약체정부가 구조화돼 있는데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결과만 내놓으라고 합니다. 국회는 야당에게 쥐놓고 언론도 전부 지금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부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슬슬 해방을 놓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부더러 국회에서 그 법 통과시켜 내라고, 부동산 잡으라고 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답은 그것인데 못한 것 아닙니까? 약체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행복도시를 왜 대통령이 혼자 밀어붙였냐고도 합니다. 혼자 밀어붙였든 10명이 밀어붙였든,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을 헌재에 끌고 가서 뒤집어 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체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탄핵하고, 수시로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고, 통과됐던 법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이런 정부를 가지고 제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자기 신임을 걸고 국회 해산해서 국민심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슈뢰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슈뢰더의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 개혁과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독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 슈뢰더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밀고 가니까 인기가 떨어집니다. 지지기반이 무너져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총리의 전권을 걸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정치 아닙니까?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사업 개혁이라는 것이 일본 개혁에 있어서 핵심이고, 아주 상징적인 개혁입니다. 성공하면 개혁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고, 이것 성공 못하면 고이즈미 개혁은 무너지는 겁니다. 대단한 개혁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개혁을 놓고 당과 총리가 호흡하면서 책임지고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까?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헌을 개정해서 당정분리를 이미 해 버렸습니다. 제가 당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신임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는 대화도 안됩니다. 이 정치가 오래 가면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안 생기지만 앞으로 한국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당선자 시절이던 2002년 12월 26일 민주당 중앙당 연

수회 때 이미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프랑스식 동거정부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이와 같은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맞게 정치구조를 전부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맞게 가자면, 국회 다수당을, 국회 과반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여당이 이루든지 야당이 이루든지 간에, 이루는 쪽에서 총리 이하의 전권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운영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의 문화도 만들어 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구도 문제 해결해 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갈등구조가 재생산되니까,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과연 극복의 대상이냐, 정책을 조율하고 합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뜻이 파트너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나라당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시비는 있었지만, 이미 직선제 정부를 만든 노태우 대통령 정부마저도 정통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는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지나 한나라당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과거의 도청으로부터, 과거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약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파트너이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현실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현실이 변화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

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한 배에 탄 선원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면 얼른 도망가야지 무모하게 맞부딪치는 것이 지도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다른 사람들하고 왜 자꾸 다른 얘기 하냐?”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1990년 3당통합 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정치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가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 독립투사들이 결코 그 당시에 다수파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 소수라고 해서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쳐야 되는 문제는 정면으로 부딪쳐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곤경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할 일을 다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제왕의 자리인가, 신하의 자리인가, 정말 골똥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제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신하의 자리에 있다면 국민을 제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민심이라고 해서 민심을 그대로 모두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신하는 쫓겨날 때는 쫓겨나더라도 그 시기에 올바르게 말하고, 충직하게 간언하고, 정직하게 소신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다른 정책은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연정 문제는 아무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주장을 하셔도 파트너가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조금 다르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야당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

고 확신하시나요?

대통령 ● 모든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이 지금 “연정, 그게 뭐 소리야? 밀실야합하지는 것 아니야? 연정 그거, 뭔지 기분이 안 좋아.”라고 하지만, 연정은 전 세계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런데 한나라당이 왜 안하려고 하지?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하자면 심판을 받아야지, 왜 안 한다고 할까? 권력을 다 준다는데도 왜 안 하려고 할까?’

한나라당이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선거구제도를 내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금 있으면 알아차립니다. 왜 못 받는지, 말은 그럴 듯하지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기반을 잃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한나라당은 움직일 것입니다.

두번째로 한나라당은 무슨 꿈수나 노림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불안감 가질 것 없습니다. 제가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좋아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탄핵도 나중에 보니까 음모더라. 연정도 다 음모 아니냐?” 이릅니다. 결국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고 자꾸 술수로 정치를 하다가 제 띠에 빠져 넘어져 놓고, 길 가다가 도로 안 보고 자기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놓고, 돌아서서 ‘그것 음모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연정 제안도 음모 없습니다. 음모 없는데 자꾸 의심을 합니다. ‘연정을 받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해도 좋으니까 이 분열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협상이라도 합시다. 연정이 위헌이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헌 아닌 것,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합시다.’ 이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내 요구입니다.

또,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줬다는 정치논리가 중요한 게 아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논리 가지고 게임하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에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민주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비판입니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실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가 결코 좋고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언론도 우리 사회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부 부끄러운 역사가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에 포함된 국민 여론도 폭넓게 수용하면 민주적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통령께서 대언론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우선 언론과 그동안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쓸데없이 불편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소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정권 또는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가 과거에 좀 비정상이었다는 평가를 들어 왔습니다. 시너라는 말도 들었고 유착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이제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로 변화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을 좀더 부려서, '앞으로는 언론의 품질까지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언론이 정부권력을 비판하고 견제·감시하듯이 정부도 언론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심을 해 봤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정권으로 집중돼 있던 시기의 언론은 오로지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큰일이었지만, 아시듯이 이 즈음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정치권력 또는 지도력의 위기라고 얘기할 만큼 권력이 분산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학계, 또 언론이 각기 권력을 행사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도 상당

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언론 스스로도 비판받고 감시·견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 비판·감시하는 관계가 있고, 또 이체는 소위 '협치' 라는 새로운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제 4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의 일치를 봐야만 그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어떤 사회적 논리나 대안에 있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과 우리 공직사회가, 정치 또는 정부가 서로 경쟁하고 상호 비판하는 수준까지 감으로써 대안경쟁을 통한 어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비판이 아주 구체화될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 해서 유착으로 얼버무릴 때의 행정보다 언론과 맞서면서 당당하게 서로 비판·견제할 때 행정품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품질은 이렇게 해서 높아집니다. 뒷거래도 안되고 적당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아울러 그렇게 되면 언론의 품질도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반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대안은 물론 비판적인 대안까지도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대안은 해당 부처에서 전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법과 조치내용들을 청와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어떻게 반론하고 해명하는가, 심할 경우 어떻게 정정하고 재송하는가를 일일이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행정과 언론 모두가 품질이 높아지는 시대, 그것이 참여정부 제2기에 있어서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질 문 ●대통령님께서서는 취임 이후 줄곧 과거사에 유달리 집착을 보여 오셨습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현실진단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제

시마저도 어렵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이 전면에서는 방식보다는 시민사회나 학계, 일반국민들의 몫으로 놓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갈등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보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복이 가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사로 보복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친일의 경우 본인들은 이미 다 저세상으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많은 일들이 다 시효가 지나 버렸고, 또 우리 사회에서 너무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필요합니다.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역사는 역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과거사 얘기를 제가 다시 한 이유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치유해 줘야 합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됩니다. 국가권력의 도덕성은 무한대라야 합니다. 거기에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위 놀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 사람들 중 누구 감옥에 넣기로 돼 있는 과거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풀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랜 전통에 '해원굿'이 있죠? 맺힌 한을 풀어 주는 굿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오랜 문화라고 하면,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원, 그것 하듯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면 4·3사건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좌제에 걸려서 고민하던 사람들, 이웃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아직 가슴에 그 한을 담아 놓고, '나 죄인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

니다. ‘나 죄인 아니다.’ 라는 국가의 증명서 하나를 꼭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쪽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복하지는 소리를 안 할 겁니다.

국가의 도덕성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도 과거사는 정리해야 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교육해서 역사에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 이것이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과오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털 것은 털고 가고,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리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 틈에 얘기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법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그 점을 좀 짚어 주고 싶은 뜻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8·15 경축사는 과거사가 핵심이 아니라 분열구조와 분열의 요인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분열의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가치갈등,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응어리,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풀고, 아울러서 국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효제도도 고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도 안 하겠다면 그것은 좀 심합니다. 친일하고 군사독재했던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뭉개고 넘어가자, 그것은 좀 심합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과거사를 밝힐 때 여기에 필요한 정도로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일도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면 구체적인 한두 가지의 사건 가지고 옥신각신

하며 정쟁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과거의 일이라도 명명백백히 좀 밝히자, 그래서 나는 도청사건이 국가권력의 범죄이기 때문에 1997년 대선 정치자금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대선자금 문제는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됐거니와 정치적 마무리를 제 때에는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질 문 ●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제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서두가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내놓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대상을 가지고 속셈을 숨겨 놓고 점잖게만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책임 있게, 앞으로 언제라도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